

##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종합대책

정부는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나타날 경제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준비해 왔음. 2016년 12월 27일 정부는 제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음. 이 대책에는 지능정보사회 도래시 경제사회적인 변화를 조망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술→산업→사회로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30년까지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. 국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음.

### 1. 4차산업혁명 발생원인 및 경제·고용에의 파급효과

- 1차(증기기관), 2차(전기), 3차(컴퓨터)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발생하며, 이는 산업 및 고용구조의 근본적 변화 초래핵심 경쟁원천인 데이터의 수집, 저장, 분석, 활용기반 조성
- AI중심 2030년 기준 약 460조원 총 경제효과 창출, 총 노동시간 중 49.7%가 자동화 가능

### 2. 중장기 종합대책의 주요내용

#### 1)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

-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고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체기술력 및 데이터·네트워크 인프라 확보
  - 대규모데이터기반 구축, 지능정보기술 확보,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구축

#### 2)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

-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을 조기 도입·확산하여 생산성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선도
  - 공공서비스영역 선제활용,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혁신파트너, 지능형의료서비스, 제조업디지털혁신

#### 3)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

-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교육·고용·복지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지능정보사회 구현
  - 교육(지능정보영재 5만명 양성), 고용(일자리아동지원 서비스 고도화), 복지(복지분야 지능정보기술 개발), 법제도(기본법 마련), 역기능(사이버보안센터, 지능정보 SW안전성평가)

### 3. 추진체계

- 산업혁명은 기술발전으로 촉발, 경제·사회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총리주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중심으로 추진
  - 국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·개편방안 마련
  -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입법부·행정부·사업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
- 실무지원은 총리훈령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범부처 지능정보사회 추진단(기재·교육·미래·행자·산업·고용부 참여)에서 지속지원

### 4. 제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법(안)

- 최연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무총리소속 제4차산업혁명전략위원회 설치, 제4차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,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임(2017년 3월 30일 발의).